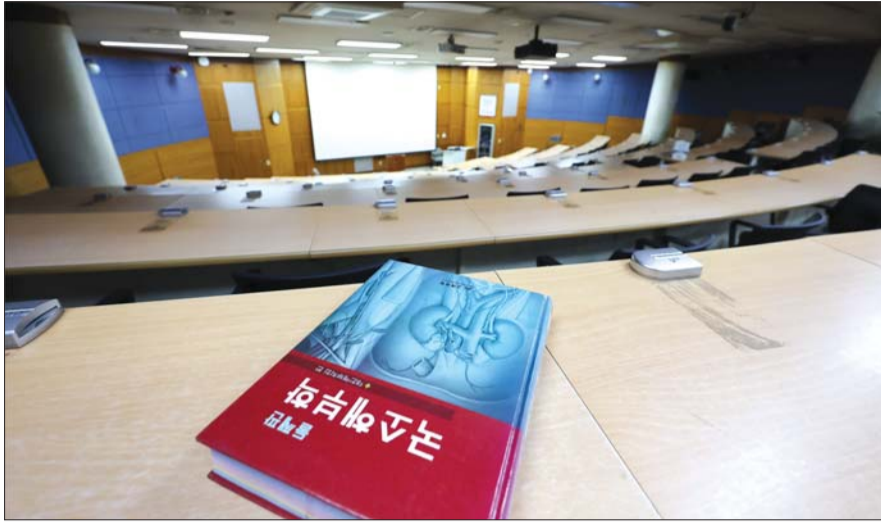


올해 의대 1학년 '최대 7500명' 전망... 내달까지 대책 마련

정원 확대 발표에 휴학한 1학년생 복학할 경우 신입생과 수업 받아야
교육부, 의대국 신설해 대책 협의 대학별 상황 맞춰 해결책 마련 계획
내후년 정상적 실습수업 불가능 우려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의대생들과 올해 신입생 등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오는 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수업에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 4000여명을 합해 최대 7500명 가량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교 맞춤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휴학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형으로 지원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하고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의대국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의대의 전반적 여건 개

선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팀별 의대 4~5곳을 맡아 대학별 상황에 맞춰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월 내로 대학과의 대 교육 관련 상의를 마치고 2월 초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휴학 여파로 올해 의대 1학년이 약 7500명에 달하지만 주로 교양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의대 교육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과 1학년 수업 대부분은 교양 과목으로 의료 관련 기초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도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고 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내놴다. 이 중 올해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수 총원 등 교육혁신 지원 과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시기는 내후년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원 과

밀'로 정상적인 실습수업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을 받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과정 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를 파악한 뒤 3월에 대학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 기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인 문해능력 온라인 진단 서비스 운영

교육부, 올해 70.4억 투입해 지원
성인 3.3%, 읽기·쓰기·셈하기 못해
내달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정식 운영

전국적으로 읽기·쓰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2월부터 성인들의 기초 문해능력을 온라인으로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70억4400만원을 들여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

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146만명이다. 전체 성인인구의 3.3%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오는 9월 공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1~4 수준으로 구분한다.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건강·안전 등 일

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투표, 금융 등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은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다.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 선정"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급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올해부터 안양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무상으로 보편 지급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난임극복 지원 등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지원된다. 또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해온 '보훈명예수당'을 36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간 1인당 144만원 지급한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2월부터 주 2회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 운영하여, 인덕원역~안양역을 오가는 야간노선(자정~오전 2시)은 1월부터 기존 2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 171세대 공급할 예정이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입체공원 도입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제안 두 건, 즉각 실행 나서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서울시장 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적으로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의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소상공원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경우 이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원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 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역 내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서울시, 2.7兆 투입해 일자리 41만개 제공

올해 상반기 중 80% 조기 선발

서울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놓아주는 '매력일자리'(3500개)와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270명)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금년 총 1만2980명 규모로 시행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직무실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